

박근혜 퇴진 운동 특집호(개정판)

최순실의 농단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의 농단이다

관련 기사 2, 3, 4, 5, 6면

총체적 부패 정권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김지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이 얹히고설킨 더러운 부패 사슬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폭로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는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마치 개인 재산처럼 여기고 사용하려 했다. 연설문 따위에 최측근 머리를 빌린 것은 일도 아닌 것이다.

박근혜는 의심증 때문에 최순실 자매와 그 가족, 김기춘 같은 유신체제 하 중앙정보부 공안검사 출신 같은 인물들만 믿을 수 있었던 것 같다. 7인회니 십상시니 하는 비선실세 의혹이 취임 초부터 끊이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자기가 믿는 사람들과만 달콤한 특혜를 누리려 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 부패 고리에서 단지 관망이 아니라 플레이어 노릇도 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재벌 회장에게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제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도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모금 주역인 안종범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기밀 문서들이 밖으로 유출된 것도 민정수석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분석들도 나왔다. 박근혜

의 지시나 교사가 아니고 이것이 가능할까?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가족들)의 40년간의 특별한 관계를 볼 때, 이런 부정 축재는 박근혜의 재산관리인(집사)인 최순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해 작업해 놓은 것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자매)이 개인적으로도 재산을 챙긴 것은 일종의 수고비 조였을 것이다.

실제로 최순실의 최측근인 고영태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최순실이 두 재단 일을 챙기면서 박근혜에게 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서를 보내는 것을 봤다.” 최순실 자신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 “언니[박근혜]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고 있잖아.”

‘창조경제’

박근혜를 정점으로, 최순실을 고리로 연결된 부패 네트워크는 (박근혜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창조경제를 이용해 체육계와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독식하고 돈을 모았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새누리당이 땅투기, 건설사업 등 다목적으로 추진한) 평창올림픽이 부정 축재의 호재로 보였을 것이고, 한류에 편승한 문화 사업들도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최순실과 정유라는 강원도 평창에 토지 7만 평을 소유하고 있고, 전 남편 정운회도 인천공항과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목인 횡성군에 수만 평 땅



대중은 “퇴진이 사과”라고 외친다.

을 갖고 있다.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의 유관회사인 광고영상회사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내 LED프로젝트를 따내어 수십억 원을 챙겼다.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도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와 마찬가지로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뒤 출석도 제대로 않고 졸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자다. 그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는 설립한 지 6개월도 안 돼 정부와 삼성으로부터 모두 14억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 예산에서 문화창조융합사업 등 관련 예산만도 1조 원으로 추정된다. 개념도 모호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1천2백78억 원이 배정됐다. 차은택과 CJ E&M 등이 이 예산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박근혜는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그룹 구본무 등을 청와대로 불러 문화체육 부문 투자 활성화와 평창 올림픽 지원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이후에도 “문화 융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도 기업들의 문화체육 지원을 칭찬해, 사실상 수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암시했다.

정경유착: 기업들도 부패 공범

대기업들은 단순히 “발목을 비틀어” 갈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도 부패 사슬의 일부이자 또 다른 수혜자이다.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을 찾아내어 여러 특혜와 뇌물을 제공하면서 박근혜의 환심을 사고 정부를 통한 특혜를 누리려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는 거품 물고 반대하던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권에는 수억에서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을 박근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답례이자 격려금이었을 것이다.

삼성그룹은 2백억 원을 냈다. 이재용 경영권 세습에서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 합병이 핵심이었는데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삼성은 장시호 법인에 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근혜가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해 온 의료 민영화는 삼성이 사운을 거는 영역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올해 한화디펜스를 인수하면서 방위산업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당연히 국가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한화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 원을 냈다. 김승연이 집행유예로 석방은 됐지만 이후 특별사면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액수가 적어서일까?

한화와 삼성은 차례로 승마협회 회

장을 맡으며 정유라 키우기에 일조했다.

CJ의 이재현은 올해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고 CJ는 차은택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을 맡아 헐값에 토지공급계약을 맺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SK는 계열사 등을 합쳐 두 재단에 1백11억 원을 냈다. 최태원이 특별사면된 지 불과 두 달 후에 일어난 일이다. SK는 올해 박근혜의 이란 방문 당시 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세종시 고속도로 사업을 따내고, 박근혜 이란 방문 이후 관련 사업을 따낸 대림산업도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를 챙긴 걸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이 비리 의혹을 받은 후 교체된 이

사진에 대림산업 상무가 포함되는 등 끈끈한 관계이다.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사장 임명에 정부의 입김이 큰 사실상의 국가기관인 포스코와 KT도 기금 마련(각각 30억 원, 11억 원)에 적극 협조했다.

롯데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돈을 돌려줬다는 정황은 이 돈들이 시커먼 돈임을 보여 준다.

자본축적 경쟁이 동력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제도적 발판을 만들려고도 경쟁해야 한다. 당연히 의회와 국가 관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일에서도 경쟁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도 더러운 커넥션의 중요한 일부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캠프의 핵심이던 이재우는 “최순실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의 실제 주인을 밝히라”고 박근혜를 공격했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 TV토론을 보면, 패널리 박근혜에게 꼼꼼하게 최태민 일가와 의 유착 의혹을 질문한다. 전 당대표 김무성조차 “최순실을 몰랐다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의 추악한 실체를 훤히 알면서도 이들은 모두 우파 정권 재창출과 개인적 출세와 축재를 위해 기꺼이 일치단결했던 것이다.

박근혜는 어쩌다 완전 코너에 몰리게 됐나

(이 절은 최일봉의 기사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한 모순들’과 연결시켜 읽으면 더욱 유용하다.)

박근혜 정부의 소임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겨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성 우파들을 주위에 포진시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신 스타일의

통치를 구사했다.

그러나 전통적 우파 지배자들이라는 인적 기반은 취임 초부터 부패 문제로 정권이 어려움을 겪게 했다. 장관 내정자들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비선실세설이 있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앉혀 정면 대응했다.

또,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 고조로 동아시아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도 박근혜에게는 커다란 모순을 안겨 줬다. 결정적으로 박근혜가 연설문 청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경제 살리기였다. 한국 경제 상황은 박근혜 정부 내내 나빠졌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배자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 배경이 됐다.

그 과정에서 성완중 리스트나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부패들이 드러났고, 기업주들 일부의 불만을 보여 줬다. 결국 조금씩 박근혜의 내밀한 부패들이 폭로되기 시작했고, 노동자 운동이 이런 배경 속에서 투쟁을 이어간 것이 박근혜의 총선 참패와 레임덕을 끌어냈다.

그 결과, 한때 “형광등 1백 개 아우라” 운운하던 〈TV조선〉이 박근혜 폭로 경쟁의 선두에 서 있다. 노동자 운동은 대중적 분노와 지배자들의 분열을 이용해 퇴진 운동에 실질적 힘을 부여해야 한다. 생산을 멈춰 이익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계급 고유한 방법으로 거리 시위와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김문성

184호 개정판을 인쇄하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월 5일 서울에서 20만 명이 시위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야당들도 참여하자고 촉구하는 한편, 별도 기구인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대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거리 투쟁체와 ‘정치적’ 대응기구를 병렬시키는 2중 구조를 제안한 것이다. 전선체 더하기 제도권 정당이라는 자민통 계열의 투트랙을 연상시키는 박원순 버전의 투트랙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제안이 어떤 식으로 물화될지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운동과 정치의 조응이라는 문제가 재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 — 편집자



"박근혜 퇴진" 요구도 못하고 머뭇거리며 눈치를 살피는 민주당.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인 5퍼센트로 추락했고, 부정 평가는 90퍼센트에 가깝다. 주류 정치학에서도 임기 말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건 민란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넘게 퇴진이나 탄핵을 바란다.

실제로, 급하게 잡힌 10월 29일 ‘박근혜 내려와라’ 서울 집회와 행진에는 초·중·고생부터 70대 노인까지 3만

여 명이나 모였다. 일주일 뒤인 11월 5일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야말로 범국민적 분노이고 총체적 불신이다. 박근혜의 온갖 악행들에 치를 떨며 지내 온 4년의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성난 민심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박근혜가 두 차례 사과까지 했지만,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시위의 규모와 강도는 지금 기층 민심을 대표할 뿐 아니라 정치적 초점을 제공해 반박근혜 여론을 더 지속·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발톱은 단지 감찰을 뿐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아직은 크게

물러선 게 아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는 경호실 요원들과 압수수색 문제로 대치까지 했지만, 정작 우병우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하고 있지만, 우병우가 맡았고 검찰 통제 등을 하는 민정수석 자리에는 최재경을 임명했다. 최재경은 검찰 특수부 출신(최순실 수사는 특수부가 담당)으로 현 검찰총장과 매우 가깝고 검찰 조직 내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검찰 장악, 최순실 수사 개입 의지가 여전히 강력한 것이다.

최재경은 박근혜의 비선 멘토 그룹 7인회와 인연이 깊다. 김기춘과 가깝고 최병렬의 조카다. 김기춘, 최경환 등이 추천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

몸통은 박근혜, 최순실은 깃털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둘의 관계가 일반인에게는 충격적인 점들도 있지만, 국가 운영의 수장인 박근혜를 단지 사인(私人)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보는 것은 사태의 진정한 본질을 흐린다.

누구를 통해서든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자행해 온 온갖 악행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기업주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쉽게 자를 권리를 기업주들에게 주려는 것, 세월호 참사의 배경, 구조와 진실 규명 등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사악한 행위들, 친제국주의 군비 증강, 복지 삭감 등의 고통전가까지.

이런 일들이 박근혜, 또는 최순실 일당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에 기업주들과 기득권층,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마음으로 지지하지 않았던가.

박근혜가 대통령 권력을 얼마나

개인 재산처럼 여겼으면, 단지 수십 년 친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도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챙겼겠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일부 대신해 정경유착 부패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부패는 단지 최순실 개인의 농단으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정권의 정치적 위기(때로는 경제 위기를 포함해) 때문에 여권 내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상호 폭로(주로 부패 사건)를 자극해 위기가 증폭되는 것은 한국의 역대 정권 임기 말에 흔히 보던 일이다.

그리고 매번 ‘시종 권력’을 휘두르던 측근(대체로는 가족)이 대통령을 대신해 책임을 뒤집어 써 왔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우도 그런 듯하다. 그런데 측근 구속은 오히려 정권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수사 방해와 억속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거국중립내각’은 시간벌기용 사기다

거국중립내각론의 핵심은 총리를 여야 합의로 뽑아 대통령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장관도 뽑아(어차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므로) 국정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사퇴시 국정 공백을 우려한 다며 더민주당의 문재인이 제안하고, 10월 말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국수습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당의 쟁점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보유한 통치 권한을 포기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는 통치권을 양보하거나 축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데다가(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듯이) 대통령 권력을 자기 사유물처럼 써 온 박근혜가 권한 이양을 할 것 같지도 않다.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야당에(심지어 새누리당에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11월 4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도 김병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경은 이명박의 BBK 사기 사건과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무혐의로 결론 내어 ‘면죄부 검사’라는 별칭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권한을 여야 합의로 호선한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이 거국내각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방안에는 대통령 권한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

10월 31일 거국내각론을 포함한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하자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 정진석이 뜬금없이 먼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데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의 거국내각론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벌려는 용도다.

성난 파도

그럼에도 박근혜는 상황을 안정화시키지도, 대중의 분출을 막지도 못하고 있다. 평일 촛불집회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11월 5일에는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12일 민중총궐기는 수십만 명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분열이 공개적으로 커지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현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다. 이미 대변인 등이 사퇴를 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초점은 박근혜의 마름인 이정현이다. 이정현이 당대표로 있으면 박근혜와 차별화를 제대로 못해 비박계 대선 주자들에게 불리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주류 야당들이다. 더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요구해 왔다. 정의당이 박근혜 하야 촉구 운동을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상호는 아예 정의당의 하야 촉구 운동과 함께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이면 된다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압박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현재 여권 추락의 반대급부로 더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니,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지금 수준에서 현상이 유지되길 바라며 오른쪽 눈치 보기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공상이다. 이런 정치 상황이 마냥 지속될 수 없다. 운동이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여권이 반격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게다가 퇴진(탄핵 포함) 요구와 선을 그었으니 더민주당은 이제 여당과 협상을 벌일 카드도 없게 됐다. 10월 31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진석이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소리냐고 우상호를 압박한 것에는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지율 5퍼센트의 정부를 상대하면서도 협상 주도권조차 못 잡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려다가는 아래로부터의 분노와 에너지, 이를 결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반면, 정의당은 ‘박근혜 하야’를 공식으로 내걸고 전국에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반박근혜 투쟁의 선두에서 왔던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나온다. 정의당의 박근혜 퇴진 캠페인이 민주당의 궤죄죄함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과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 등의 리더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대선관리 중립내각?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악행을 심판하는 일을 철저하게 국회 내 협상으로 한정시켜 대중의 불만이 일터와 거리에서 투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대중은 최악과 차악이 정치권력을 분점하는 양당 체제의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얘기다. 여야 간 특검 협상이 이런 미래를 예시한다.

여권은 분노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고 몇몇 파격적인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관망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려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대중의 즉각적 분노가 식기 시작하면 우파가 다시금 반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진정 박근혜를 퇴진시켜 그 악행을 중단시키려면 국회가 아니라 일터와 거리에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기사의 전문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최일봉

박근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서원(최순실) 등이 공권력, 그것도 최고 공권력을 농단한 일에서 비롯했다. 측근 비리에 의한 부패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부패는 지배자들(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의 살벌한 암투를 통해 그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됐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 내부는 직접적으로는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주요 경제정책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다. 이는 또한 경제 위기 심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더 악화되는 가운데 개혁이 시도되면, 이윤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지배자들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고무된 노동자들의 저항도 박근혜의 위기 악화에 한몫했음을 놓치기 말아야 한다. 화물연대와 철도 노동자 등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저항은 다른 노동자들과 학생, 미취업 청년 등도 저항할 자신을 갖게 해 주고 있다.

요컨대 정권 부패, 지배자들 간의 쟁투, 경제 위기, 계급투쟁 등은 경제 위기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됐던 것이다.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 필자가 2013년 10월 3일 단체의 일부 회원 토론 자리에서 했던 연설인데, 위에 언급된 박근혜 정부의 모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녹취를 풀어 신문에 실는다.

박근혜의 셋째 강점은 박근혜가 아주 강성 우파들로 정권의 핵심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군장성, 공안검사, 국정원장 출신자들로 자기 주위를 확고하게 에워쌀 수 있는 행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기춘을 포함한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정원장 남재준 할 것 없이 강성 우파들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강성 우파들로 주위를 에워쌀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이든 처음 집권했을 때 방방책을 쓰는 시능을 하면서 다양한 지방 출신자 등을 끌고루 갔춘다는 시능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구축했다.

넷째 강점은 박근혜의 강점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적대자들의 약점이다. 약점들이 있다. 첫째 약점은 태생적인 약점인 부패이다. 둘째 약점은 경제와 공약 파기이다. 셋째 약점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커다란 딜레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넷째 약점은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보려면 크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인 강점부터 얘기하겠다. 첫째, 지배계급이 단결해 그를 밀어 주며 선거를 치렀다. 과거에는 대선 때마다 지배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완전히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 주었다. 그래서 국정원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대선에 개입하는, 권한 남용이라는 부패 행위를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지배자들이 참여하게 분열했다면 국가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싸우게 되니 합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눈치다. 보이고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우는 지배계급과 우익이 총단결을 해 선거를 잘 치렀던 것이다.

박근혜의 둘째 강점은 박근혜가 박정희의 생물학적 딸일 뿐 아니라 정치적 적자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실제로 유신 체제의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이 상당히 고무원했던 박정희 시대라는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배자들뿐 아니라 많은 후진적인 대중에게도 박정희 시대는 경제가 잘 나갔던 시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천대를 받고 수탈과 억압을 받았건만 그럼에도 워낙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경험과 그 시대는 잘살았던 시대라는 향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박근혜의 셋째 강점은 박근혜가 아주 강성 우파들로 정권의 핵심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군장성, 공안검사, 국정원장 출신자들로 자기 주위를 확고하게 에워쌀 수 있는 행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기춘을 포함한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정원장 남재준 할 것 없이 강성 우파들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강성 우파들로 주위를 에워쌀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이든 처음 집권했을 때 방방책을 쓰는 시능을 하면서 다양한 지방 출신자 등을 끌고루 갔춘다는 시능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구축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 강점은 박근혜가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강점인 동시에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적의 강점이자 약점이 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하며 그 부분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강점이었다. 왜냐하면 경제가 확장하던 박정희 시대를 표상하는 인물인 박근혜가 내세운 공약들이기에



11월 5일 서울 도심에 20만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처럼 잘살 수 있었지 하는 헛된 믿음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는 약점들이 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다. 첫째 약점은 태생적인 약점인 부패이다. 그리고 둘째 약점은 경제 상황과 공약 파기이다. 셋째 약점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커다란 딜레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넷째 약점은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약점

첫째 약점인 부패는 뇌물, 권한 남용, 비리, 불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썩어빠진 정권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인자 실재를 겪으면서 드러났다. 그래서 임명되는 자들이 낙마하고 그중에서 도 김용준은 완전히 압권이었다. 진정한 압권은 윤창중이기는 하다. 김용준은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를 하고도 너무도 수처스럽게 변호사협회에 의해 변호사 개업도 정지당했다. 그럴 정도로 썩어빠진 인물을 중용하니, 윤창중은 말해서 뭐하나.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더 말하지 않았다. 우선, 선거 때부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완전한 권한 남용이다. 그런 짓을 할 정도야, 그냥 썩어빠진 것이다. 박근혜는 1974년부터 5년 동안 박정희의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했다. 박정희가 열

마나 썩어빠진 자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축재했고, 박근혜는 이런 것들을 함께했던 것이다. 1979년에 박정희가 죽어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 박근혜는 전두환에게서 6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하는 방식에 따라 27억~2백40억 원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돈을 왜 받았나?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이에 더해 육영재단, 영남학원, 영남대의료원, 한국문화재단도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부패의 표상인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는 부패 문제에 완전히 둔감하고 완벽한 사이코패스다.

그러다보니 박근혜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국정원 규탄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 운동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애초부터 결여돼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태생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알렸다. 그리고 운동의 여파로서 채동욱 퇴임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사퇴 등으로 지배자들의 추악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배자들 사이에서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운동의 성과는 벌써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둘째 태생적 약점은 경제 상황과 공약 파기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일부이다. 한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로부터, 또 그 안에서 얘기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40년에 걸쳐

저성장을 겪고 있다. 물론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반에 제한된 회복이 있었지만, 이 시기 전체로 보면 선진 산업 경제들의 이윤율이 떨어지고 있다. 평등으로 환산하면 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저하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저성장의 효과 하나가 바로 재정적자이고, 따라서 긴축의 필요성을 낳은 것이다. 왜 그런가? 저성장을 하니까 세수는 적고 세출은 많으니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복지 지출을 아무리 하지 않으려 해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얼마 전까지 노동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부양해줘야 한다. 자본가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착취할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수는 적고 세출은 많으니 적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긴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벌써 긴축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경제 위기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했고 바로 여기에서 긴축 문제가 생겨났다. 긴축이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긴축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매우 나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연금·복지 제공을 너무 많이 했다는 논리로 귀

결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즐겨 하는 주장이다. 이것은 곧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복지 파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긴축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나 비효율 경영 때문이라거나, 사람들의 솜씨가 많아서라거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따위의 주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윤을 저하 법칙(경향적일지라도)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긴축이 내는 효과는 개혁주의 정당의 운신을 폭을 좁게 만든다. 이런[1970년대 중반 이후] 시기에 개혁주의 정당은 개혁을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집권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재원이 없어서 개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엄청난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개혁을 바라는 정서 때문에 집권했는데 개혁을 제공할 줄 수 없는(모순) 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록 진보 개혁주의 정당은 아니지만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집권해도 굉장한 큰 어려움을 맞이할 것이다. 민주당이 NGO들 및 개혁주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세웠도 개혁을 제공할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긴축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은 수세적인 처지에 있더라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부르주아 개혁주의자들은 제공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왼쪽으로의 급진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약점을 이용해 왼쪽뿐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급진화가 일어난다. 우익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스의 황금세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헝가리의 요비크당 등 유럽의 파시스트 정당들이 이런 사례들이다. 전 세계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효과로 정치적인 양극화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에서도 매우 우파적인 정권이 등장한 것이다. 더 우파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익적 정권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좀 더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든지, 아무튼 정치적 양극화가 유력할 것이다. 이제는 아래로부터 투쟁 벌이지 않고 그저 양전하게 선거만 치르는 것은 더 우파적인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보다 더 우익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제국주의 경쟁

셋째 약점으로 넘어가자. 둘째 약점으로 언급했던 경제 악화가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각국 자본가들은 국민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는 국가와 자본이 밀접하게 공조를 취하게 된다. 바로 그런 상황이 제국주의

경쟁을 낳는 것이다. 동아시아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이 다오위다오-센카쿠와 같은 섬을 둘러싸고 벌이는 긴장이 그런 사례다. 일본은 거기에서 미국의 대리인 구실을 한다.

그런데 미·중 갈등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딜레마를 안겨 준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국이라는 점은 여전히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 미국은 나머지 강대국들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 G8 중에서 미국 밑에 있는 국가들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은 합의의 과실을 끊임없이 해 왔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등을 통해 과시해 왔다. 그리고 또한 중국 경제가 언제까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남한 지배자들 중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중국과 소원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자본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지배자들과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불필요하게 사이가 나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노무현이 동아시아 “균형자” 구실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랬다가 미국에게 얻어맞고 찌그러졌다. 분명 박근혜는 정치·군사적·지정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친미이다. 그러나 박근혜도 취임 직후 방미 전에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계획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 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였다. 미국 언론은 이를 공격했다. 마침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고 나서 “깨갱” 했다. 그래서 미국과의 후호를 엄청 강조했다. 한국 지배계급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미국·일본과 긴밀하다는 모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지배계급 내에서는 대외정책을 놓고 긴장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부 지배자들은 정부가 드러내놓고 친미를 해 공언히 중국을 자극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마지막 약점으로는 노동운동의 도전 가능성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영향력이 큰, 매우 온건한 노동조합인 구소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조직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즉,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이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박근혜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물론 급진화는 매우 더디고 불균등하기 때문에 과장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노동운동이 정치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저항 세력일 노동계급 운동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11월 2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하는 공공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운동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가가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다

이정원

박근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고 퇴진 여론이 들끓으며 박근혜 퇴진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의 2차 대국민 사과와 최측근들의 구속 같은

은 꼬리 자르기로 정권의 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규모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11월 5일 시위에는 전국에서 30만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와 최측근의 비리와 부패는 분노를 끓오르게 한 기폭제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무능한 대처, 세월호 진상 규명 외면,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개혁, 친재벌 정책 등에 대한 광범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그동안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에 분노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파업을 벌이며 정부에 맞서 왔고, 퇴진 운동이 시작되자 핵심 부대를 이

했다. 특히 9월 하순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나섰다.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이 파업은 2주가 넘게 진행됐고 철도 노동자들은 지금도 한 달 넘게(합법성 고수 때문에)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용자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으로 내모는 정책에 반대해 열흘 동안 파업하고 부산 신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조직된 노동계급이 적극 나서

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끈질기게 저항을 해 왔다. 박근혜 취임 1년이 되던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강성 우파 박근혜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중에게 심어 줬다. 2015년 내내 노동개혁에 맞선 힘겨운 투쟁이 벌어졌다. 이

에 패하는 2016년 박근혜의 총선 참패로 패라는 뇌관이 터진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위기를 가속시키는 데 노동자 투쟁이 상당히 기여했다.

총선 참패에도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비

한일군사협정 체결 계획 중단하라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4년 동안 표류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논의하다가 국무회의 2시간 전에 상정하고 국내의 거센 저항에 밀려 협상이 전면 백지화된 이래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의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됐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약정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전면적인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지난 9월 박근혜는 라오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와 이 협정 체결을 논의했다. 박근혜는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소통은 중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일본-팜-하와이 일대가 “단일 전장권”이 됐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 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의 지적이다. 그러니까 한국터러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이 파견될 오키나와·팜·하와이는 물론, 후방기지 구실을 할 일본 본토를 방어하는 데도 기여하라는 것이다. 북한 ‘위협’을 앞세워 한국에 군비 분담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합의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 협정을 바랐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국내 반대 의견을 무릅쓸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아사히 신문〉)고 일본의 한 외무성 간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가 말했듯이, 일본은 이번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무산될까 봐 우려한다.

미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협정은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완전히 융합한 새로운 집단방위구상을 완성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동북아 MD 무기들을 합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벨이 이 협정의 필요성을 “한·미·일이 미사일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새로운 지휘 통제 체계”라고 요약한 까닭이다. 북한,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상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 공조 네트워크를 완성하려면 대북·대중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대

둘째,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미국·일본은 중국·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자기를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신속한 정보 공유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 출동해 단독 또는 한국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펼칠 바란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 해역(한국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결림돌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라는 일본 헌법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평범한 동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반감이다.

지난해 일본 의회에서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일본은 첫째 결림돌을 제거할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라도 거머쥐려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여전히 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과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할 수 있었다’고 미화하는 자들, ‘위안부’에 대한 온전한 사과를 거주장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이 협정 체결을 바랄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가져올 파장은 분명하다. 이 협정은 동북아 평화를 근본에서 뒤흔들 것이다.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미·중 패권 다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이 협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자.

김여진

▶ 5면에서 이어짐

노동계급은 국가 기간 산업을 움직이고 사용자들에게 이윤의 원천을 제공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손을 놓으면 체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노동계급이 이 힘을 사용하면 정부와 사용자들을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세력 관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노동계급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종종 이런 구실을 해 왔다. 오늘날 성인 대부분이 행사하는 보통선거권과 여러 민주적 권리, 국가가 제공하는 크고 작은 복지들은 모두 대규모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다. 한국에서 군부독재 종식은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어 벌어진 7~9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덕분이었다. 6월 항쟁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었다.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도 박근혜 퇴진 열망은 매우 광범하다. 11월 4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운동을 대규모로 조직해 발표했다(4만 2천2백13명). 전국 여러 도

시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에도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파업을 이어가고 박근혜 퇴진 운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며 자신감과 투지를 더 높여 가는 효과도 얻고 있다.

여러 부문 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내건 투쟁과 파업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 이롭다. 지금 노동자 투쟁을 벌이는 것 그 자체로 퇴진 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즉각 선언·집행한다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열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할 것이다. 10월 29일 집회 때 “박근혜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선언을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촉구하는 노동자 서명 운동에는 며칠 만에 노동자 수천 명이 동참했다. 지금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진 부분은 거리 시위 참가 이상의 행동에 나설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하면, 기층의 활동가들은 이에 호응해 파업을 조직하고 나설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 조직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11월 12일 열릴 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가 파업으로 연결되면 박근혜 퇴진 운동은 상당한 탄력을 받아 확대·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데도 이로운 것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아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여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일반회계)은 예상수익의 14퍼센트로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법을 어기고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축소한 것이다.

정부가 법도 지키지 않고 국고 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역대 정부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줄이려 해 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을 쟁취했을 때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 사측이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그 기원이다.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이 직장건강보험으로 시작한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972년 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주된 쟁점은 국고 보조금의 현실화였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1977년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만 직장건강보험이 시작됐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후에도 김영삼 정부는 계속 국고 지원금을 축소하려 했다. 김대중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를 내자, 다시금 국고 지원이 화두에 올랐다. 기대수익의 20퍼센트(일반회계 14퍼센트, 담배세 6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안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조차 한시적 지원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르면 국고 지원은 내년까지만 효력이 있다.

즉, 1987년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 공격받고 있는 과정이다.

목적

둘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이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병원산업과 여타 보건의료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 주려 한다.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들 중 밑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정부연구기관조차 건강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앞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그런데 거꾸로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다. 즉 수익자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는 건강보



재단 만든다며 재벌들한테 1천억 모으면서, 건강보험은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험 재정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공익성도 악화시킨다. 특히 높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 허용 조처는 신약과 신의료기기 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됐다.

단적으로 한국이 인구 대비 아시아 최대의 로봇수술기기 보유국이 된 데에는 이처럼 보장성이 낮은 건강보험 제도가 큰 구실을 했다. 마구잡이로 기계를 도입해도 환자들에게 비싼 치료비를 받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허가 약제 등 비보험약품 사용도 용인돼, 약값이 비싸지고 제약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제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의료기

기산업과 제약산업에는 호재가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보장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즉, 보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한다. 국가 책임은 쏙 빠지고 말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가 모든 복지제도에 도입하려 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다. 즉, 노동자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주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국고 지원 축소의 목적이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의 국고 지원 비율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다.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는 13.4퍼센트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렇다면 위 표에 나오지 않는 영국·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떨까? 미국·멕시코 정도를 제외하고 위 표에 나오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조세로 책임지는 국가의료체계(NHS)를 운영한다. 민간 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같은 의료보장 제도 때문에 총의료비 중 국고 지원 비중은 한국보다 높다.

게다가 한국은 병원의 95퍼센트가

민간 소유고, 각종 의료기기,약품 등도 모조리 시장 논리에 내맡겨져 있다. 한국은 가히 시장의료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금지 정도가 유일한 제한 장치인데, 이조차 정부가 나서서 흔들려 대기 일쑤다.

시장의료의 결정판

그러다 보니 돈 없는 환자들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 그 결과 2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가 생겼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자, 의료 이용의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가속화를 보여 준다. 이런 의료체계 아래서 부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는 총비용의 50퍼센트만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때문에, 최소 2개까지 적용하더라도 1백20만 원(개당 60만 원)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수 없다. 또한 임플란트 지원보다 우선되어야 할 틀니도 50퍼센트만 보장해 주는 등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건강보험에서 해마다 막대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니 흑자를 이유로 국고 지원금마저 축소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닌가.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채권과 펀드에 투자하려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는 돈 한 톨을 아까워하더니,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사 운영하듯 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일부만 필름 지원하고서 생색을 내더니, 무려 20조 원을 남겼다. 그리고 이 돈으로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를 획책하는 한편 국고 지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빨라지는 노령화와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도보다 국고 지원 확대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노동자들 사이의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만 조정하는 방안)가 마치 건강보험재정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막대한 흑자를 핑계로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 해 왔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이를 실질적인 의료비 인화에 쓸 수 있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표>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출처: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스위스
지원비율	14.8	37.1	26.0	55.0	47.0	33.7	39.0	17.0
비교연도	2010	2008	2008	2010	2008	2009	2005	2007

주: 국고 보조는 세급,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정부 보조금을 모두 포함시켰음.

